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74
----------	-------

발의연월일 : 2025. 5. 12.

발 의 자 : 신장식 · 황운하 · 장종태
김준형 · 김선민 · 정춘생
서왕진 · 강경숙 · 이용우
이해민 · 차규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법왜곡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실제 법왜곡행위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

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수행상 준수가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2. 법령적용의 왜곡(증거관계 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이나</u> <u>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u> <u>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u> <u>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u> <u>수행상 준수가 요구되는 기준</u> <u>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u> <u>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u> <u>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u> <u>에 처한다.</u></p> <p><u>1.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u></p> <p><u>2. 법령적용의 왜곡(증거관계</u> <u>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u> <u>하는 것을 포함한다)</u></p> <p><u>②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u> <u>을 받는 사람에게 제1항의 죄</u> <u>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u> <u>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u> <u>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u> <u>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u> <u>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u> <u>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u></p>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한다.